

# 정부간행물의 출판현황과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운영실태분석

강 미 혜\*

## <목 차>

### I.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3. 연구범위와 제한점
4. 연구방법
5. 용어의 정의

### II.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유통 현황

1. 정부간행물의 발간
2. 정부간행물의 유통

### III.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소장과 납본 현황

1.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소장
2. 국가도서관의 정부간행물 납본

###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 I. 서 론

### 1. 문제제기

최근 우리 사회의 민주화 진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은 정보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의 대중화 현상을 가져왔다. 이는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행정과정에서의 참여욕구를 증대시키는 등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에 기초하여 행정참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부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행정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효율적

\*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도 짧을 뿐더러,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에서는 지역민들은 공무원이 주도하는 행정하에서 알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미비에 따른 지역민의 욕구불만이 증대되는 현시점에 있어서 정부간행물은 정부의 활동과 업적을 공식적 기록물로 간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날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정보사회에 있어서 정부간행물의 발간취지와 목적대로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를 결합하여 행정자료실과 도서관에서의 정부간행물의 효율적 운영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간행물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국내외적으로는 미흡한 상태였다. 그래도 국내에서는 정부간행물에 대한 몇 편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연구만을 뽑아보면 최정태<sup>1)</sup>, 배영환<sup>2)</sup>의 정부간행물의 발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 연구, 홍정화<sup>3)</sup>, 박금순<sup>4)</sup>의 정부간행물의 배포실태를 조사한 연구, 조민정<sup>5)</sup>의 정부간행물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와, 최영옥<sup>6)</sup>의 대학도서관에서의 정부간행물의 관리현황을 조사,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모두가 정부간행물에 대한 어느 한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된 것들이며 전반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활용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 1) 최정태, "한국 정부간행물 발간에 대한 통계적 고찰," *도협월보*, 19.5(1978), pp.12-19.
- 2) 배영환, "한국정부간행물 발간 실태분석과 이에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립중앙도서관*, 1993.
- 3) 홍정화, "정부간행물 배포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4) 박금순, "정부간행물의 도서관 배포제도에 관한 고찰: 남본도서관 및 남본제도를 중심으로," *도서관학연구지(송의여전)*, 18(1992.9), p.147.
- 5) 조민정, "정부간행물 이용실태와 이용자행태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충무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6) 최영옥, "대학도서관의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간행물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부간행물의 실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서관 자료로서의 수집과 활용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정부간행물이 효용적 가치가 있는 정보원로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은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가?”라는 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 1) 정부간행물은 어느 정도 발간되고 유통되고 있는가?
- 2) 국가도서관이나 행정자료실의 운영체제는 어떠한가?
- 3) 국가도서관의 납본실태는 어떠한가?
- 4) 정부간행물에 관한 서지, 색인, 목록 등의 2차자료는 어느정도 발간되고 있는가?

##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정부간행물은 그 내용이나 형태면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확정하는 일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정부간행물을 정부의 활동수행 과정에서 생산 또는 사용되는 지식이라고 정의할때 이는 매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간행물의 범위를 다소 축소시켜 고급 정부기관에서 생산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정부간행물이 국민들에게 정보전달매체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유통체제, 정부간행물에 대한 2차자료의 발간종수, 도서관 및 행정자료실의 운영체제, 국가도서관의 납본상황 등을 조사해봄으로써 정부간행물의 활용실태를 알아보

#### 4 圖書館學論集

고자 한다.

본 연구는 수행과정에 있어서 몇가지의 제한점을 갖고 있다. 즉, 정부간행물 자료실에 대한 조사대상으로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행정자료실, 공보처 정부간행물제작소자료실, 재정경제원자료실로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시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정부간행물에 대한 출판물 통계상황이 매우 미비하기때문에 실제적 상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 4.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정부간행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국내외 서적, 논문 등을 통한 문헌조사를 택하였고,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활용실태의 분석에 있어서는 총무처 행정자료실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공보처 정부간행물 제작소 자료실등을 방문하여 행정자료실의 운영실태, 정부간행물의 발간실태, 정부간행물의 2차정보원의 발간종수, 국가도서관의 납본상황 등 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 5.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간행물 :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간행물에는 정부기관의 명칭이 출판사항으로 명시되는 것으로 정부기관의 범위에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각 부처 및 각 위원회, 지방 자치단체와 소속관청의 부속기관, 연구소,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하며 간행물의 형태는 도서 및 비도서를 포함한 모든 간행물을 통칭한다.

도서관 : 국가 도서관을 위시해서 행정자료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자료실과 도서관을 통칭한다.

## II. 정부간행물의 발간 및 유통현황

### 1. 정부간행물의 발간

#### 1) 정부간행물의 인쇄, 간행

많은 국가에서 정부간행물은 그 특성상 일반간행물과는 다른 인쇄, 간행방식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수행방식을 유형화하면 4가지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간행물의 인쇄, 간행이 전문적인 정부기관에 의하여 일원적으로 행해지는 방법이다. 둘째는, 인쇄기관과 간행기관이 별도의 정부기관으로 설립되어 각기 인쇄, 간행을 분담하여 행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통일된 간행기관에서 인쇄를 담당하고 간행은 각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방법과, 혹은 역으로 간행기관에서 통일적으로 간행업무를 담당하고 인쇄는 개별적으로 행하는 방법이다. 넷째는, 인쇄와 간행을 위한 통일된 기관이 없이 정부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인쇄와 간행을 하는 비조직적인 방법이다.<sup>7)</sup>

상기한 4가지 방법중에서 정부간행물의 인쇄와 간행을 모두 중앙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첫번째 유형은 정부간행물 관리의 능률화와 통제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겠다. 이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과 영국 등으로서, 이 유형을 명미형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인쇄, 간행이 각 정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도록 한 네번째 유형은

7) 박금순, "정부간행물의 도서관 배포제도에 관한 고찰: 남본도서관 및 남본제도를 중심으로," 도서관학연구지(송의여전), 18(1992.9), p.147.

본산적 관리로 인해 효율적인 정부간행물의 관리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 유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는 불란서와 서독을 들 수 있으며 이 유형을 대륙형이라고 부른다. 둘째와 셋째유형은 첫째와 네째방법을 절충한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에 예시된 네가지 방법 중 네번째 유형인 대륙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정부간행물의 생산과 보급에 능률과 통제를 도모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조직적인 형태로 발간되는 정부간행물의 효율적인 조정방안을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정부 각 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조정하고 심의하여 정부간행물의 중복발간으로 인해 야기되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유사간행물을 폐간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정부간행물 발행에 관한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령의 뒷받침을 가진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93년에는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간행물이 189종<sup>8)</sup>인데 비하여 같은 년도에 공보처에서 발행한 「정부간행물목록」에 수록된 간행물은 1,230종<sup>9)</sup>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간행물보다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간행물이 더욱 많이 나와 각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발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보처가 발행하는 「정부간행물목록」의 수록범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정부관리 기업체 및 단체로 국한하고 있어 실제로 발간되는 정부간행물의 정확한 양은 추정하기가 불가능하다.

## 2) 정부간행물의 발간

정부간행물의 발간실태는 '93년도와 '94년도의 「정부간행물목록」과 '94년도의 「정부간행물 조정심의목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의 정부간행물과 일반출

8) 「정부간행물 조정심의 목록」, 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1994.

9) 「정부간행물목록」, 공보처, 1994.

판물의 출판비교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간행물은 1993년도에 389종을 발간하여 26,304종을 발간한 일반출판물의 1.47%에 불과하나, 발행부수면에서 정부간행물은 25,840,990부로 139,221,724부를 발행한 일반출판물의 18.6%에 달한다. 즉 1종당 평균 발간부수에 있어서 정부간행물은 66,429부이며 일반출판물은 5,292부로 정부간행물의 발행부수가 훨씬 많았다.

〈표 1〉 정부간행물과 일반출판물의 출판 비교

발간내용	분 류	정 부 간 행 물	일 반 출 판 물	비 고
발 간 종 수 (종)		389	26,304	1.47%
(정 부 기 관)		(233)		(0.60%)
발 간 부 수 (부)		25,840,990	139,221,724	18.6%
(정 부 기 관)		(14,274,584)		(10.6%)
1종당 평균발간 부수 (부) (정부기관)		66,429 (61,264)	5,292	

주 1) 출처 : 「출판문화」, 대한출판문화협회 1993.2.

「정부간행물 조정심의목록」,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 1994.

공보처에서 발행한 정부간행물목록에 수록된 정부간행물을 발행기관별로 구분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정부간행물의 발행기관별 발간종수 분석

구 분	기	관	1992 (%)	1993 (%)
발 간 종 수	행	정 부	736(27.5)	989(26.4)
	입	법 부	70( 2.6)	44( 1.2)
	사	법 부	32( 1.2)	44( 1.2)
	행	정 재 관 소	0( 0.0)	5( 1.2)
	중	앙 선 관 위 원 회	0( 0.0)	15( 0.1)

8 圖書館學論集

구 분	기 관	1992 (%)	1993 (%)
발 간 종 수	각 시 도	589 (22.3)	839 (22.4)
	각 시 도 교 육 청	142 ( 5.3)	277 ( 7.4)
	정 부 투 자 기 관	330 (12.3)	300 ( 8.0)
	정 부 유 관 기 관	772 (28.8)	1,230 (32.9)
	계	2,680 (100.0)	3,743 (100.0)
발 행 기 관 수	행 정 부	42	44
	입 법 부	4	4
	사 법 부	1	2
	행 정 재 판 소	0	1
	중 앙 선 관 위 원 회	0	1
	각 시 도	15	15
	각 시 도 교 육 청	15	15
	정 부 투 자 기 관	21	21
	정 부 유 관 기 관	63	94
	계	161	197
1 개 기 관 평 균 발 간 종 수	행 정 부	18	22
	입 법 부	18	11
	사 법 부	32	22
	행 정 재 판 소	0	5
	중 앙 선 관 위 원 회	0	15
	각 시 도	40	56
	각 시 도 교 육 청	9	18
	정 부 투 자 기 관	16	14
	정 부 유 관 기 관	12	13
	계	145	176



〈표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3년에는 정부간행물이 3,743종 발간되어 1992년보다 1,063종이 증가하였다. 이것을 다시 간행종수의 비율로 살펴보면, 정부유관 기관이 전체 간행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행정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부간행물의 유형간 격차는 〈표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크게 차이가 났는데, 이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은 보고서였고 그 다음은 국민들의 생활전반에 필요한 경제·사회·문화·환경·보건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교양생활 정보지인 일반간행물로 나타났다. 교육자료와 정부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결과로 산출된 각종 통계자료는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표 3〉 정부간행물의 유형별 발간 통계

간행물 유형	종 수	구성비 (%)	간행물 유형	종 수	구성비 (%)
의 회 자 료	57	1.6	보 고 서	1,204	32.2
법 령 자 료	36	1.0	연 설 강 연	6	0.2
사 법 자 료	16	0.4	홍 보 자 료	163	4.4
국제간자료	3	0.1	교 육 자 료	361	9.6
편 람	218	5.8	기 록 자 료	68	1.8
통 계 자 료	320	8.5	총 서 자 료	231	6.2
백 서	49	1.3	일 반 간 행 물	405	10.8
연 감	195	5.2	지 도 차 트 류	5	0.1
공 보 자 료	320	8.5	서 지 자 료	78	2.1
특 허 자 료	8	0.2			
계				3,743	100.0

반면에, 정부간행물의 수집 및 검색에 매우 유용한 자료인 서지자료는 2.1%에 불과하였고, 참고도구(reference tool)로 적합한 법령, 사법, 국제간 자료 및 편람 등과 같은 자료들은 비교적 소수에 속했다. 세계 각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정부

간행물의 발간이 나날이 증가 추세인 점에 비추어 정부간행물의 발간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서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얻기 위해서는 정부간행물에 관한 2차 서지정보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2차 서지정보원의 발간은 특히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발간되고 있는 서지정보원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연간)과 「문헌정보」(월간), 공보처의 「정부간행물목록」(연간)이 가장 포괄적으로 정부간행물을 수록하고 있으며, 교보문고에서 발간되는 「종합도서목록」의 부록에 「정부간행물 목록」과 「정부관련기관 간행물」이 수록되어 구입이 가능한 정부간행물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목록들도 정기간행물의 수록범위가 완전하지 못하며 간행빈도 역시 신속하지 못해 좀더 수록범위가 완전하고, 정보제공이 신속, 정확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2차정보원의 발간이 요구된다.

정부간행물의 주제별 발간실태를 살펴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주제는 <표 4>에서

<표 4> 정부간행물의 주제별 발간 통계

간행물 주제	종 수	구 성 비 (%)
사 회 과 학	2,264	60.49
기 술 과 학	912	24.4
총 류	183	4.88
철 학	10	0.27
종 교	2	0.05
순 수 과 학	99	2.64
예 술	98	2.62
어 학	17	0.45
문 학	74	1.98
역 사	84	2.24
계	3,743	100.0

사회과학일반	59종
경제학	714종
사회학	166종
정치학	146종
행정학	553종
법학	181종
교육학	373종
기타	73종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부기관의 활동범위와 관련이 깊은 정치, 경제, 행정, 사회, 교육분야를 포함하는 사회과학분야로 전체의 60.4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 높은 비율을 차지한 주제분야는 국민생활의 실용적 측면과 밀접한 공학, 환경, 농학, 의학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응용 및 기술과학분야로 24.4%를 차지하였다. 그외에 정부기관의 시책 및 활동상황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어문학류, 철학 및 종교 등의 간행물이 10.23%에 이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주제류간에 심한 편차를 보여 주었다.

간기별 정부간행물의 발간실태는 <표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정기 간행물이 전체간행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간행물은 간기가 일정한 간행물보

<표 5> 정부간행물의 간기별 발간 통계

간 기	'92발간종수	'92구성비 (%)	'93발간종수	'93구성비 (%)
일 간	1	0.0	0	0.0
주 간	15	0.6	21	0.6
격 주 간	16	0.6	15	0.4
순 간	10	0.4	6	0.2
월 간	186	6.9	225	6.0
격 월 간	41	1.5	42	1.1
계 간	139	5.2	165	4.4
반 연 간	43	1.6	52	1.4
연 간	610	22.8	971	25.9
격 년 간	3	0.1	22	0.6
3 년 간	0	0.0	5	0.1
5 년 간	0	0.0	14	0.4
부 정 기	1,616	60.3	2,205	58.9
계	2,680	100.0	3,743	100.0

다 일정하지 않은 간행물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간기가 일정한 간행물 가운데는 연간이 그 나머지의 절반을 차지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월간, 계간 순이었다. 그리고 격월간, 반년간으로 발간되는 정부간행물은 각각 2% 가까이 있었으나, 일간, 순간, 격주간 등은 1%도 되지 않는 극히 낮은 비율로 발간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부간행물의 발간유형은 13가지에 이를 정도로 매우 다양하였으나 부정기간행물과 연간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 2. 정부간행물의 유통

### 1) 정부간행물의 인쇄 및 간행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의 간행체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大陸形<sup>10)</sup>이므로 정부간행물을 통일적으로 관장할 특정기관이 중앙에 없고 그 일을 전적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그 폐단이 크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중앙에 통합적인 업무수행기관이 없다는 것은 곧 조종기관이 없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類以인쇄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가진 간행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쓸데없는 낭비는 결국 부실을 가져오게 되지만 이 부실은 간행업무가 정부 각 기관에 일임되고 있는 현실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는 각 부처나 기관에서 간행에 따르는 업무를 자력으로 수행하고자 하면 업무를 담당할 전문적인 인적자원의 문제 또는 인쇄기관 등의 문제에서도 적잖은 애로와 불편을 겪고 있는 데서 빚어지기도 하고, 부실은 또 무엇보다 각 기관의 간행업무의 독자성이 실질적으로는 정부간행물의 통일성의 결핍으로 인해 간행업무의 무원칙과 무정견을 빚고 마는 데서 초래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간행물에서는 무엇보다 편집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10) 박금순, 前掲書, p. 147.

가 많아 실적보고서인지 분석적인 종합보고서인지, 또는 교양이 추가 되는 것인지 계몽이 추가되는 것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않는 간행물을 접하게도 된다. 심한 경우에는 편집자가 바뀌면서 題號가 바뀌는 일도 일어나고, 종종 편집내용이 번덕스럽게 달라지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모두 한마디로 간행업무의 무원칙과 무정건을 드러내는 무책임한 난맥상이라 하겠다.

미국의 간행실태<sup>11)</sup>를 살펴보면, 미국의 의회, 행정부, 사법부 그밖에 大審院 및 각 부처에서 발행되는 모든 정기간행물은 「정부인쇄기구」에서 총괄적으로 맡아 인쇄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판매와 배포까지도 일괄해서 책임지고 있다. 정부인쇄기구의 문서감독관은 매월 일회씩 전 달에 간행된 정부간행물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간행물에 대해서 손쉽게 알 수 있으며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그 목록작성만 보아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동 인쇄기구의 업무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1963년도 당시의 미국 정부인쇄기구의 인쇄도서수는 10억 2,240만부로 판매 도서수는 5,300만부였으며, 미국내의 약 600관의 보존도서관에 배포한 수는 280만부였다.<sup>12)</sup>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는 그와같은 엄청난 양의 출판물에 대한 리스트를 매월 작성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닐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까닭은 정부간행물의 간행이 합리적이며 조직적인 통합체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에 있어서 미국의 정부간행물과는 비교할바도 못되는 형편이며, 또한 우리나라는 어느 기관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지 손쉽게, 또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적지 않은 간행물에서 간행의 무원칙과 무정건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것의 주된 원인은 간행을

11) Marc A. Levin, "Access and Dissemination Issues Concerning Federal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 Libraries*, 74(1983), pp.128-129.

12) William J. Bassett, *Collection Development and Public Access of Government Documents*, ed. Peter Hernon, London, Meckler Publishing, 1982, p.73.

전담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구가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결국 정부자체의 무지와 무원칙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태도가 결핍되어 있으며 국민에게 알릴 의무의 의식과 의지가 결핍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2) 배포

정부간행물의 배포와 이용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주도하는 것은 이용이라고 하겠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배포가 이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의도하에서 배포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본다면 이용이 배포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배포는 이용의 편의를 따라야 한다. 이 편의는 두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별적으로 이용에 응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도서관에 비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정부간행물 이용실태<sup>13)</sup>를 살펴보면, 개인에 대한 배포는 4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국회의원을 통한 무상배포이고, 둘째는 몇개의 행정기관에 의한 무료 또는 유상 배포이다. 셋째는 정부인쇄기구의 문서관리에 의한 판매형식을 통한 배포가 있다. 그리고 네번째로 상무성 과학기술 서비스국과 의회도서관의 사진복사에 의한 유상배포와 도서관에 대한 배포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수령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① 모든 간행물을 정부인쇄기구의 문서관리관으로부터 수령할 자격이 부여된 지정보존 도서관
- ② 보존소가 아닌 도서관 및 행정기관을 통해 간행물을 수령하는 도서관
- ③ 상무성의 과학기술국 및 의회도서관의 사진복사 봉사부
- ④ 문서급송계획

13) Coral Turner and Ann Latta, *Current Approaches to Improving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Office of Management Studies, 1987. p.18.

## ⑤ 마이크로필름 복사

⑥ 원자력위원회 보존소 등이다.<sup>14)</sup>

미국 정부간행물의 여러 배포양식과 우리나라 정부간행물의 배포 실태를 대조해 보면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나 완전한 「정부간행물목록」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간행물의 이용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국민들은 정부간행물을 이용하려해도 현재 어떠한 간행물들이 나오는지 잘 알 수가 없으며 설사 알고 있다고 해도 어디서 그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서울에서만 단 한 곳 정부간행물을 판매하는 「정부간행물센터」가 있으나 원래의 설립의도와는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은 거의가 비매품이기 때문이며 간혹 판매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부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사정 역시 신통치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간행물을 어느 정도 수집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뿐이며 지방의 공공도서관에는 정부간행물이 배포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우리나라의 정부간행물의 배포는 말할 수 없이 한심한 상태이다.

배포가 이와같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에 놓여 있다는 것은, 첫째 정부의 홍보활동이 매우 빈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어찌보면 정부가 국민의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있거나, 적어도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되며, 아니면 애초에 국민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정부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부실한 배포체제는 정부가 정부간행물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봉사를

14) Turner and Latta, *op. cit.*, p.18.

외면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바로 정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는 정부의 첫번째 의무이며 모든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된 정부간행물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 그 원인들을 살펴보자.

### Ⅲ.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소장과 납본현황

#### 1. 도서관의 정부간행물 소장

정부간행물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 각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정부유관기관 등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이 정부간행물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행정자료실, 공보처 정부간행물제작소 자료실 등이다.

정부 각 부처의 산하기관이나 시도기관에서도 자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실들이 있지만 이런 자료실은 거의 대부분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기관에서 설립한 자료실은 근본적으로 자기관의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간행물 소장자료실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공보처 정부간행물제작소 자료실로만 국한되어 있다. 이들 자료실의 규정에는 이용대상을 공무원, 대학생, 연구기관의 연구자, 일반인으로 밝히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자료실의 홍보부족으로 정부간행물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은 활발하지 못하다. 1991년에 설립된 공보처 정부간행물 제작소 자료실은 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않아 본래의 설립취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부족으로 하루에 평균 2-3명 정도의 이용자가



방문하고 있을 뿐이다.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의 정부행정자료실의 경우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외무부 직원이며 하루평균 20명 미만의 이용자가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공보처 정부간행물 제작소 자료실은 「정부간행물목록」을 월간, 연간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의 정부행정자료실은 격월간으로 「정부행정자료속보」를 발간한다. 그리고 일년에 1회정도 자료실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TV나 신문을 통한 홍보도 겸하고 있다.

정부간행물의 이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좀더 활발한 홍보활동을 통해 이들 자료실의 이용을 증진시켜야만 할 것이다.

## 2. 국가도서관의 정부간행물 납본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자료실, 공보처 정부간행물 제작소 자료실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간행물을 제공하도록 법률로 규정<sup>15)</sup>되어 있으나, 발행기관들의 인식부족으로 납본제도는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문화재 관리국과 소속 연구기관인 문화재 연구소가 지난 '90년과 '91년에 발간한 책자는 모두 39종이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6종, 국회도서관에는 22종이 소장되어 있고,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정부행정자료실과 공보처 정부간행물 제작

15) 현재와 같은 납본제도가 확립된 것은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 1424호로 도서관법이 제정, 공포되고 1965년 3월 26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발행하는 간행물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간행물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간행물은 그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에 제공하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1963년 11월 26일 법률 제 1454호로 제정, 공포된 국회도서관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발행한 간행물 및 이외의 자 기관에서 발행한 간행물을 국회도서관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었다. 박금순, 前掲書, p. 153.

소 자료실에도 각각 2종과 20종이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이처럼 납본제도는 발행기관의 인식부족과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부족으로 잘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납본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어야만 국민은 쉽게 그들의 '정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문제점

오늘날 정부간행물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원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간행물은 그 생산단계에서부터 배포, 수집, 이용, 관리 그리고 서지통정 등에 이르기까지 체제 및 구조상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그동안 수차례 지적되어왔다.<sup>16) 17)</sup>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간행물의 발간에 대한 것으로 정부간행물의 발간종수가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부처가 조직구조 및 업무의 성격상 균등하게 정부간행물을 발간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지만 중앙부처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10여종 미만의 정부간행물만을 발간하는 기관이 10개기관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중 5개기관에서는 고작 3~4종을 발간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70%이상에 이르는 25개기관에서 연간 10여종 미만을 발간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국민을 소외된 존재로 만들어 주고 있다.

둘째, 정부간행물에 관한 서지, 색인, 목록 등의 2차정보원의 발간종수가 크게 부족하여 정부간행물의 입수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만들 뿐만 아니라 속보성도

16) 신학균, "政府刊行物の 製作과 利用保管上의 諸問題," 도서관 102 (1966. 2), pp.22-26.

17) 최영옥(1990), 前掲書, p.29.

결여되어 있어 탐색도구로서의 역할도 매우 미비하여 정부간행물의 활용에 제한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간행물에 관한 종합목록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보처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목록」인데 이 목록에는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은 누락된 채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정보간행물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국가서지라고 할 수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과 「문헌정보」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정부간행물들을 포괄적으로 수록하고는 있으나, 이 목록집은 정부간행물만의 독립목록이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유형의 자료들과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 외에는 정부간행물을 남분받고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수서목록」과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 있다<표 6>.

#### 〈표 6〉 주요 참고정보원

- 
- 국정신문/공보처. 서울: 공보처국정신문과, 19- . 주간.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 상하/국립중앙도서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 . 년간.  
 수서목록/국회도서관. 서울: 국회도서관, 1985- . 년간.  
 문헌정보/국립중앙도서관, 1972- . 년간.  
 정부간행물목록/공보처. 서울: 공보처, 19- . 년간.  
 정부간행물목록: 대학간행물 포함/국회도서관. 서울: 국회도서관, 19- . 년간.  
 정부간행물조정심의목록/정부간행물조정심의위원회, 19- . 년간.  
 정부간행물소개/총무처. 서울: 총무처정보전자계산소, 1993.  
 정부기록보존소 소장문서색인목록/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서울: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19- .  
 정부기록보존소 소장문서총괄목록/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서울: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19- . 년간.  
 정부행정자료실 소장자료목록/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서울: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1982- . 년간.  
 정부행정자료속보/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행정자료실, 19- . 격월간.  
 정기간행물기사색인/국회도서관. 서울: 국회도서관, 1969- . 계간.  
 종합도서목록/교보문고. 서울: 교보문고, 1983- . 년간.
-

그리고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행정자료실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政府行政資料速報」와 공보처 정부간행물제작소에서 주간으로 발간하고 있는 「국정신문」을 비롯해 일종의 판매목록인 교보문고의 「종합도서목록」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정부간행물목록'과 '정부관련기관간행물' 등을 통해서도 정부간행물을 다양하게 파악할 수는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망라성과 서지기술의 양식, 정보제공의 신속성 등에 있어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다음의 <표 7>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기관마다 정부간행물의 연간 발간종수를 달리 파악하고 있으므로<sup>18)</sup>,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언제 발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국가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 시간을 투자해 이룩한 간행물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政府刊行物에 관한 목록들은 대부분 속보성과 망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부간행물의 현황이나 발간 및 소재파악 등이 명확하지 못하다.

<표 7> 각 기관이 파악한 정부간행물 종수

기 관 \ 연 도	1990년	1991년
공보처 홍보과	1,306종	1,674종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	711종
국립중앙도서관	2,069종	1,943종

주 2) 납본된 간행물을 각 기관에서 파악한 것임.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는 1990년에 자료파악을 하지 않았음.

세계, 이용자가 정부간행물을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즉 상당한 수의 정부간행물이 판매가 불가능한 비매품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배포대상에 있어서 비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판매가 가능한 有價誌의 경우에는 시장성이

18) 성우제, "정부간행물 총체적 혼란," 시사저널, 통권 187호(1993.3.25), p.92.

약하기 때문에 발간부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아울러 판매가 가능한 유가의 정부간행물은 전체 정기간행물의 10% 내외에 불과하며, 그 판매센터도 서울의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도시에 있는 서점에 한정되어 있는 판매센터의 부족과 판매센터에 대한 홍보미비, 그리고 판매센터에 전시된 정부간행물이 전체 유가간행물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네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간행물의 생산 및 배포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1991년에는 정부간행물의 전문적 기획, 제작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모처에도 정부간행물제작소를 설립하는 등 그동안 다원화해왔던 정부간행물의 인쇄와 간행을 일원화시켜 보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독자적인 방침하에 정부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므로 판매유무, 발간부수 등 불균형과 版型の 혼란함을 비롯해 유사간행물의 발간 등 많은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정부간행물을 납본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행기관의 인식부족으로 납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때문에 각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정부간행물의 종수가 일치되지 못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출판물총목록」이나 「정기간행물기사색인」 등과 같은 2차정보원 역시 수록 범위가 완전치 못한 결함을 갖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2차정보원들은 이용자들의 정부간행물 접근에 한계를 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정부간행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여섯째, 정부간행물은 일반 상업출판물과는 달리 비영리성을 목적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의 제공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정부간행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알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시킬 것이다.

## 2. 개선방안

정부간행물은 국가의 소중한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을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정보원으로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정부간행물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여건들이 조속히 성숙되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 각 부처에서 발간하고 있는 간행물들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는 최신성과 망라성을 지닌 정부간행물 목록이 공개되어야 할것이다. 특히 이 목록들은 서지정보의 기술양식 및 내용의 표준화와 함께 정부구조의 변경이나 간행물자체의 변화에 따른 사항 등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간행물의 내용파악에도 도움을 주어 자료의 선정이나 입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초록지도 발간토록 하여야 하겠다.

둘째, 정부간행물 제작소에서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발간되는 자료들의 無定型化될 규격을 체계화 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서지통제를 위해 일반 상업출판물에서와 같이 반드시 정부간행물에도 바코드시스템과 ISSN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세째,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간행물의 생산, 보급을 총괄처리할 수 있는 정부간행물 발간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공보부의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는 정부간행물의 생산과 유통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간행물이 각 기관에서 분산적으로 발간, 배포되어 있어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필요한 곳에 정기간행물이 배포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배포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발간기구를 설치하여 정부간행물의 생산과 배포를 일괄적으로 담당토록 하고 정부간행물의 발간을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간 정부간행물 목록집과 판매목록집 등과 같은 최신의 2차 서지정보원을 발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공보처 정부

간행물 제작소 자료실이 각기 납본규정에 의해 정부간행물들을 수집하고는 있으나 정부간행물이 일반 국민들이나 학술연구자들에게 폭넓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도서관과 도별 공공도서관 등에 정부간행물을 기탁하는 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sup>19)</sup> 즉 정부간행물을 발간기구가 총괄적으로 맡아 발간한 후 이를 기탁도서관에 소장시켜 인근에 있는 타 도서관을 통해 상호대차에 이용하거나 이용자에게 직접 참고봉사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도서관협회내에 정부간행물에 관한 상설기구를 설치토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도서관협회내에 정부간행물을 위한 상설기구 (Government Documents Round Table, GODORT)<sup>20)</sup>를 설치시켜 정부간행물의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기구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서관 현장에 있는 사서들은 정부간행물의 활용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각 도서관의 실정에 맞추어 정부간행물을 입수해 나가는 수서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에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정부의 행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정보와 올바른 정보의 확

19) 미국은 1895년에 제정한 인쇄법과 1962년에 개정된 납본도서관법을 연방법전 제44편(United States Code, title 44,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에 통합하여, 미국의 연방정부간행물의 인쇄, 제본, 배포를 (U.S.C. title 44 Chapter 19 Depository Library Program)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약 1,400개의 납본도서관이 지정되어 있다. Elizabeth J. Pokorny and Suzanne M. Mitter, U.S. Government Documents,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pp.3, 62.

20) 신현덕, "정부간행물의 수집, 정리 및 이용," *도협월보* 18.8(1977), p.24.

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들로 하여금 손쉽게 정부간행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있어서 그 초석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정부간행물의 활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한국의 정부간행물의 발간과 유통체제의 미비, 납본제도의 시행부족, 도서관, 행정자료실의 비효율적인 운영체제, 정부간행물에 대한 서지, 목록, 색인 등 2차정보원의 미비 등은 정부간행물이 국민의 국가행정에 대한 알 권리와 정부의 알릴 의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간행물은 어느정도 발간되고 있는가? 정부간행물의 종류는 매우 부진하여 일반 출판물의 1.47%이며 발행부수는 18.6%이다. 정부간행물 중에서는 ① 발행기관별로는 정부유관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서는 행정부가 발행종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자료의 유형별로는 보고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일반간행물, 교육자료, 통계자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③ 내용의 주제별로는 사회과학분야가 60.49%, 응용 및 기술과학분야가 24.4%였고, 어문학, 철학, 종교 등에서는 소수의 간행물만을 발행하여 주제류간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④ 발행의 간기별로는 13가지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으나, 이중 부정기 정부간행물과 연간이 전체 정부간행물의 80.0%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정기 정부간행물이 전체 정부간행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 〈표 5〉 참조).

국가도서관이나 행정자료실의 운영체제는 어떠한가? 정부간행물을 관장하는 기관이 중앙 행정부에 없고 각 부처와 기관의 임무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며, 정부 각 부처는 독자적 방침하에 정부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어 판매유무, 발간부수 등이 불균형하고 판형 혼란 및 간행물의 중복 등 무원칙, 무정건의 원리로 인한 난맥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발행된 정부간행물조차 이용자에게 대한



홍보부족으로 방치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정부간행물이 비매품이므로 입수도 곤란한 실정이었다.

국가도서관의 납본실태는 어떠한가? 국가도서관에 모든 정부간행물을 납본하도록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발행기관의 인식부족으로 납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간행물에 관한 서지, 색인, 목록 등의 2차정보원이 얼마나 발간되고 있는가? 정부간행물에 관한 서지, 색인, 목록 등의 2차정보원의 발간종수는 크게 부족하며 자료의 입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보성도 결여되어 있어 탐색 도구로서의 역할이 매우 미비되어 있어 일반 이용자가 정부간행물을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현재 정부간행물에 관한 종합목록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보처 발간의 「정부간행물목록」이 있으나 이는 입법부, 사법부의 정부간행물이 누락된 채 행정부의 정부간행물만을 수록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서지에 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출판총목록」과 「문헌정보」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발간하는 정부간행물을 수록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정부간행물에 대한 독립된 목록이라기 보다는 다른 여러유형의 자료들 중 한 부분으로 소개되고 있다. 정부간행물을 납본받고 있는 국회도서관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수서목록」과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 정부행정자료실에서 발간하는 「政府行政資料速報」, 공보처 정부간행물제작소에서 발간하는 「국정신문」, 일종의 판매목록으로 교보문고에서 발간하는 「종합도서목록」등이 정부간행물을 소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목록집들이 망라성과 서지기술의 양식 및 정보제공의 신속성 등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결과 각 기관마다 정부간행물의 연간 발간종수를 달리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 어떠한 자료들을 언제 발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국가적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자해 이룩한 정부간행물들이 사장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간행물에 관한 목록들은 대부분 속보성과

망라성이 결여되어 있어 정부간행물의 현황이나 발간 및 소재 파악 등이 명확하지 못하였다.

## 2. 제언

정부간행물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기존 비매품 위주의 간행물들을 有價誌로 전환시켜 이용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최신성과 망라성을 지닌 정부간행물 목록 및 초록지를 지속적으로 발간토록 한다.

(3) 무정형한 자료규격의 체계화 및 서지통정을 위한 바코드시스템과 ISSN을 도입토록 한다.

(4) 국가적 차원의 정부간행물의 발간기구를 설치한다.

(5) 정부간행물 기탁제도를 도입하여 도별로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정부간행물을 소장토록 한다.

(6) 한국도서관협회내에 정부간행물에 대한 관리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한다.

(7) 정부간행물의 입수와 활용을 위한 사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다.

## 〈참 고 문 헌〉

강동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992.

- 김영신. “우리나라의 政府刊行物의 실정과 問題의 所在.” 논문집(한남대), 13(1983). pp.27-44.
- 남재우.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행정과전산, 42(1990). pp.81-95.
- 박금순. “정부간행물의 도서관 배포제도에 관한 고찰: 일본도서관 및 일본제도를 중심으로.” 도서관학연구지(송의여전), 18(1992). pp.145-158.
- 박미라. “한국 정부간행물의 발간현황과 서지통정의 문제점.” 문헌정보학보(전남대), 3(1988). pp.45-60.
- 배영환. “한국 정부간행물 발간 實態分析과 이에 따른 問題點 및 改善方案.” 국립중앙도서관. 1993.
- 성우제. “정부간행물 총체적 혼란.” 시사저널. 통권 187호(1993. 3. 25). pp.92-93.
- 신학균. “정부간행물의 제작과 이용보관상의 제문제.” 도서관, 통권 102호(1966). pp.22-26/통권 103호(1966). pp.33-36.
- 신학균. 이조혁. “정부간행물의 활용방안.” 도서관, 통권 27, 12(1966). pp.4-23.
- 신현덕. “정부간행물의 수집, 정리 및 이용.” 도협월보, 18.8(1977). pp.18-24.
- 윤상기. “한국에 있어서의 정부간행물의 서지통정.”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1982.
- 정중훈. “정부간행물 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행정간행물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1989.
- 조민정. “정부간행물 이용실태와 이용자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지방의정연구회. 주민의 알 권리와 행정정보 공개, 1992.
- 최영옥. “대학도서관의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0.

- 최정태. "한국 정부간행물 발간에 대한 통계적 고찰." *도협월보*, 19, 5(1978).  
pp. 12-19.
- 최정태. "한국 정부간행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2.
- 홍명자. "정부간행물 관리에 관한 고찰." *연구논문집(효성여대)*, 24(1982).  
pp. 461-482.
- 홍정화. "정부간행물 배포에 관한 연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93.
- Bassett, William J., *Collection Development and Public Access of Government Documents*,  
ed. Peter Hernon, London, Meckler Publishing, 1982.
- Boyd, Anne Morris, *United States Government Publication*. 3d ed. Rev. by Rac  
Elizabeth Rips. New York, Wilson, 1949.
- Hadden, Susan G. A. *Citizen's Right To Know: Risk Communication and Public Policy*,  
San Diego, Westview Press, 1989.
- Hajnal, Peter I., ed. *International Information: Document, Publ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of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988.
- Levin, Marc A., "Access and Dissemination Issues Concerning Federal  
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 Libraries*, 74(1983). pp. 128-129.
- Pokorny, Elizabeth J. and Suzanne M. Mitter, *U. S. Government Documents*.  
Englewood, Libraries Unlimited, 1989.
- Turner, Coral and Ann Latta, *Current Approaches to Improving Access to Government  
Documents*.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Office of Management Studies, 1987.

##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Present Situ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and the Operation of the Publications in Library

Mia Hye Kang\*

### 〈Abstract〉

Government Publications are published to keep records of governmental activities and performances.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oriented society, it is badly required for the operation system of government publications and a library to be effectively managed with government publications for satisfying 'right to know' of people and improving the obligation of government to 'let people know.'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uch five research items as the situation of the publication and distribu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the operation system of the publications in library, the number of publications regarding secondary information sources for the publications, and the legal deposit of the publications in the National Library, in order to proceed with a subject as to how much the government publication is satisfying 'right to know' of people.

The research findings were suggested as follow :

- 1) Despite the fact that the publication of government publications has

---

\* Professor,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uksung Women's University.

been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in numbers and kinds, it is unfortunately pointed out that the publications, distributions and sellings of them were not well organized and systematic. That is, the government publications had not been published more than 1.47% of all publications in number. Moreover, more than the half of the publications were non-periodically or annually published. To make the matter worse, it was not easy to get an access to the publications because of the publications not to be sold.

2) It appears that people could not use the publications efficiently because the library and administrative document office did not pay sufficient attention to public relations for all sorts of government publications. Not only that, there were not enough numbers of publications regarding such secondary information sources as bibliography, index and catalog. A speedy searching capacity for the information gave rise to another serious problem which the government publications could not be effectively used.

3) It is legally stated that all sorts of government publication should be deposited to the National Libraries. However, the law was not properly put into force because of lack of understanding of government agencies about the law.